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18(금) ~ 2023.08.24(목)

제공일시 2023 09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8.18(금) ~ 2023.08.24(목)

제공일시 2023 09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됨
- EU 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음
- 전환기에는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음
-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의 페널티가 부과됨
- 다만, EU는 전환기 초반에 해당하는 10월부터 2024년 말까지, EU의 산정 방식이 아닌 제3국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출량을 보고하는 경우도 한시적으로 인정기로 했음

(경향신문, 2023.08.18) 김은성 기자

(ESG경제, 2023.08.18) 김강국 기자

2. '中 태양광' 숨통 죄는 美...韓 초긴장

-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우회해 태양광 모듈을 수출해 온 중국 업체들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태양광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음
-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BYD홍콩(캄보디아), 뉴이스트솔라(캄보디아법인), 캐내디언솔라(태국법인), 트리나솔라(태국법인), 비나솔라(베트남법인) 등 5개 중국 기업이 동남아를 우회해 이른바 '편법 수출'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음
- 상무부는 내년 6월부터 이들 법인의 태양광 모듈 수출품에 대해, 최소 30%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임 동남아에서 태양광 모듈을 공급받던 미국의 태양광 설치 업체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결국 태양광 발전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 이러한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가 '초강수 조치'를 선택한 것은 자국 중심의 태양광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2가지 측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됨

(헤럴드경제, 2023.08.22) 양대근 기자

3. 日 매체 "美, 삼성·하이닉스 中 공장 반도체 규제 유예 연장 확정"

-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은 복수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기업 대상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음
- 현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만료됨 연장 기간은 현재 미정이나,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공급망 혼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임
-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 합류한 점도 유예 연장 요인으로 작용했음

(아주경제, 2023.08.23) 윤주혜 기자

1. 국내 기업 지속가능보고서 '속빈강정'...ISSB 공시기준에 크게 미달

-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는 성현회계법인이 주최한 'ESG 데이터 프로세스 고도화' 세미나에서, 국내 200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내용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만든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2)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S2가 요구하는 세부적인 공시 주제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의해 공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40% 미만으로 조사됐음
- S2의 전략 영역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전략과 의사 결정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흐름 ▲기후회복력으로 나뉘는데,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5개 세부주제 중 하나라도 공시한 기업은 68%였고, 5개 주제 전체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18%에 불과했음

(ESGRUDWP, 2023.08.18) 이신형 기자

2. "친환경·자율주행차 시대" 가속...미래차특별법, 국회 8부 능선 넘었다

- 자동차 부품 기업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에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음
- 산자중기위는 이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음
- 이번 특별법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부품 기업이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에 혜택을 제공함
- 기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음
-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임

(이데일리, 2023.08.22) 경계영 기자

3. 3MW급 상업 생산 임박...국내 첫 상용화 시설[그린수소 제주②]

- 제주에서 그린수소의 상업 생산이 임박하면서, 이르면 내달부터 수소차가 제주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소재 3MW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수소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순도 검사 결과가 이번 주 내로 나올 예정임
- 수전해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3MW 그린수소 실증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며, 총 222억원이 투입돼 4778㎡ 부지에 수전해, 버퍼탱크, 튜브트레일러 등 장비와 시설을 갖췄음
- 이번 시설은 하루 약 1t(최대 1.2t), 연간 219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실증 사업의 목표는 국산 수전해 설비를 대규모 단지로 만들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데 실제 적용하고, 국산 수전해 설비를 상용화 하는 것임
- 도는 지난 4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함덕 버스 회차지)에 국내 최초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도 완공한 바 있는데, 3MW 생산시설에서 트레일러를 통해 출발한 수소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로 옮겨진 뒤 실제 차량으로 공급됨

(뉴스1, 2023.08.22) 양영전 기자

1. JP모건 임원, “탈탄소가 기업이 무시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인 이유”

- JP모건의 탄소전환센터 책임자인 라마 바리안카발(Rama Variankaval)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디지털화와 마찬가지로, 탈탄소는 세계 금융시장의 메가트렌드”라며 “이 거대한 추세는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20년째 JP모건에서 근무하고 있음 그는 ESG 주제가 2018년에 매우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JP모건은 2020년 기후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은행 전략을 구현하는 탄소전환센터를 공식 발표했음
- 그에 따르면, IRA는 탈탄소 기술 회사의 순 자본 비용을 최대 5%까지 낮췄고, 1000억달러(약 132조 원)이상의 투자가 발생시켰음
- 또 민간자금 및 벤처캐피탈 자금 조달을 통해 기후 기술 기업에 연간 약 500억달러(약 66조원)가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음

(CNBC, 2023.08.22) Catherine Clifford 기자

2. "원전·수소도 청정에너지" CFE 인증제 만든다·관건은 '국제 확산'/"CFE 국제기준 자리매김 땀 철강·석유화학 산업에 '단비'"

-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CFE포럼이 내달 중으로 포럼 의장과 워킹그룹장 등 인선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함
- CFE포럼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음
-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CFE 포럼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CFE의 범위와 기준, 인증서 거래방법 등을 결정함
- 일차적인 협력 대상국은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발달해 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당이 쉽지 않은 국가들임

(이데일리, 2023.08.24)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2023.08.24) 김형욱 기자

3. "육류에 '환경세' 도입해야"...美·EU, 대체육 보조금 '쥐꼬리'

-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육류 제품에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음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2020년까지 미국과 EU가 대체육에 지출한 공공자금은 4200만달러(약 563억원)로, 축산업계에 대한 공공자금 445억달러(약 59조6567억원)의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음
- 유럽 축산업계는 대체육·배양육업계보다 보조금을 1200배, 미국은 800배 더 많은데, 연구나 혁신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도 97%가 축산농가로 흘러들어가고 있음
- 연구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육류 가격에 환경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는 과세, 대체육 연구, 소비자 대상의 정보 제공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음

(뉴스트리, 2023.08.21) 이준성 기자

1. SK에코플랜트·KIND 등 팀 코리아, 미국 6000억원 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 SK에코플랜트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정책펀드 등으로 꾸려진 ‘팀 코리아’가 총 6000억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사업권을 수주했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 SK에코플랜트, 현대건설, 탐선은 EIP자산운용이 조성 예정인 미국 텍사스 콘초 태양광 프로젝트 펀드 투자계약과 사업권 인수계약을 각각 맺었음
-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콘초카운티에 459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1173만여㎡ 부지에 약 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준공 이후 35년 동안 매년 약 852GWh의 전력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임
-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대·중소기업, 공기업과 정책펀드가 ‘팀 코리아’로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미가 있음

(한국경제, 2023.08.20) 김소현 기자

2. 고려아연, 내년 호주에서 그린 수소 생산 예정

-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는 올해 하반기에 시운전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에 있는 그린 수소 공장의 상업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공장은 124메가와트급의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로, 초기 생산량은 연간 140톤이며 생산된 그린 수소는 주로 수소 지게차의 연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음
- 고려아연은 2030년까지 호주 공장에서 28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이 중 100만 톤 이상을 암모니아로 전환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한화임팩트와 SK가스와 함께 호주에 암모니아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8.18) 홍정화 기자

3. 에퀴노르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가동"/포스코이앤씨, 에퀴노르사와 해상풍력 진출

- 포스코이앤씨는 노르웨이의 해상풍력발전기업 에퀴노르사(社)와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인 ‘울산 반딧불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항에서 70km 떨어진 해수면에 750메가와트(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는 울산광역시 전체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에퀴노르와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해 국내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개발, 건설, 운송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임

(에퀴노르, 2023.08.24) 고은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8.18(금) ~ 2023.08.24(목)

제공일시 2023 09 0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바덴폴 해상풍력 건설 중단 이유?...풍력발전 공급망 투자 관건, 2026년까지 133조원 필요

(인팩트, 2023.08.21) 이재영 기자

-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우드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들의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해상풍력 공급망에 1000억달러(약 133조원)를 투자해야 함
- 지난 7월 스웨덴 에너지 대기업 바덴폴(Vattenfall)이 영국 북해 연안에서 진행하던 1.4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중단한바 있음. 바덴폴은 터빈 가격, 인건비, 자금 조달 문제로 건설 비용이 약 40% 이상 급증해,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밝혔음. 풍력터빈 건설을 위한 대출의 이자율이 높아졌고, 공급망 또한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임
- 국내에도 사업비 2조3000억원 규모로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였던 전남 영광 낙월 프로젝트도 비슷한 이유로 좌초됐음.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수익성 하락을 이유로 모두 손을 떼고, 사업 주체였던 서부발전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자 490억원 규모의 출자를 철회했음
-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풍력사업 주요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을 꼽았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2년 발행한 ‘세계 에너지 전망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구리는 전기차와 해상풍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물일 뿐 아니라 육상풍력, 태양광, 원자력 발전에도 쓰임
- 2021년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탈탄소 경제를 위해 135개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발표했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77기가와트 용량의 새로운 발전시설이 필요함. 그러나 전력 및 에너지산업 건설업체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해상풍력산업이 비용 증대와 공급망 확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막대한 투자 없이는 현재 예상 수치인 연간 30기가와트 추가 발전량 확보도 불가능함
- 우드 맥킨지는 업계가 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로 공급과잉과 프로젝트 시기의 불확실성을 꼽았음. 지난 2015년 진행된 발전시설 건설은 공급과잉을 야기했기 때문임. 그전까지 연간 500대에 머물렀던 업계 내 터빈 생산량은 이후 약 800대 이상으로 증가했음
-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오랜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자재비는 급등, 수익성은 악화된 것도 투자 부족의 원인임.
- 불확실한 프로젝트 시작 타이밍도 문제임.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예정된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조금, 전력구매계약(PPA) 등 시장 진입로는 확보했지만, 경제성을 따져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투자 결정(FID, Financial investment decision)을 받지 못했음
-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많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프테이크(Off-Take, 생산되는 산출량의 특정 지분을 장기로 구매하는 계약)가 지연되고 있음.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2025~2027년 예정 프로젝트들은 2028년~2030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음
- 실제로 유럽의 해상풍력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블룸버그는 매년 시행되는 영국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정부 입찰에서 최초로 해상풍력 부문에는 입찰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보조금 정책이 도입된 지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임
- 영국 해상풍력산업은 정부로부터 광활한 해안선 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성장해왔음. 그러나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점점 입찰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하락했음.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비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해에는 입찰자가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임
- 이달 초 영국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업체들이 직면한 비용 문제를 일부 지원하기 위해 해상풍력 계약 예산을 기존 2200만파운드(약 374억원)에서 총 2억2700만파운드(약 3865억원)로 확대 편성했음.

-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경매에 참여 가능한 입찰 최대 가격이 너무 낮으면 이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음. 올해 경매 최대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44파운드(약 7만원)로 전년도인 37.35파운드(약 6만원)보다 실질적으로 낮음
- 블룸버그는 경매에 실패한다면 영국 정부의 기후 목표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논평했음